

## 경제: 거시경제 정책 방향

정순원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우리나라 경제 현황

1997년 초부터 우리 경제는 한보 부도 사태와 노동법 파동으로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설상가상으로 기아 사태까지 겹쳐서 금융시스템이 마비되는 양상이 빚어졌다. 이에 따라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면서 자본의 해외 이탈과 신규 유입 지체로 급기야는 달러 부족 사태가 발생해 국가 부도의 일보 직전까지 갔었다.

사실 이같은 금융 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거시경제는 매우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왔다. 1997년 3/4분기까지 6%대의 실질 GDP 성장률과 4%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였고, 경상수지 적자폭도 1997년에는 GDP 대비 3% 이내로 축소되었다. 재정 정책도 신중하게 이루어져 1997년도 재정수지는 소폭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통화 증가율도 물가 관리를 위한 목표 범위의 하한선

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 정책은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그 한계를 드러냈다. 광범위한 시장 규제는 국가 경제 위기 시에 신속적인 대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관치금융체제에 안주해온 금융 기관들은 막대한 부실채권의 축적을 극복하지 못했다. 게다가 연초부터 잇달아 발생한 대기업들의 부도 사태는 한꺼번에 문제점을 노출시켜 우리 경제 전반의 대외 신인도를 급격히 떨어뜨리게 하였다. 달러 부족에 따른 외환 위기는 국가 부도의 위기로 치달아, IMF의 구제금융 요청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외환 위기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국내 금융시스템의 복구는 아직 요원하다. 또한 구제금융의 대가로 당장 올해부터 우리나라는 거시경제 정책을 포함하여 금융 시장, 노동 시장, 기업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경제 운용은 IMF의 경제 안정화 프로그램

의 틀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하는 새정부는 당면한 외환 및 금융 위기를 해소하고 IMF관리체제를 조기에 종결시켜야 하는 막대한 임무를 띠게 되었다. 그렇다면 새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

### IMF관리체제 하의 거시경제 여건

IMF는 경상수지 적자 축소와 물가 및 환율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저성장, 통화 및 재정 긴축과 함께 산업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IMF 간에 체결된 협약에 따라, 1998년 이후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여건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전망이다.

첫째, 우리 경제는 1998년부터 당장 저 성장과 고실업을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IMF의 요구에 따라 실질 GDP 성장률은 올해에 3% 이내로 낮추고, 1999년에는 잠재 성장률 수준인 6%대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올해 성장률은 2%대를 기록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마이

너스 성장도 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 소비와 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실업률은 4~5% 정도, 실업자 수가 최대 100만 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여기에 산업 및 금융 부문의 구조 조정이 본격적으로 뒤따를 경우 대량 실업 사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둘째, IMF는 물가 상승률을 5.0% 이내로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물가 상승률을 1998년에 5%, 1999년 4.6%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98년 상반기 안에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공공 요금과 醫保 수가를 동결하고 재정 지출을 최대한 억제, 물가 상승에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공공 요금이 인상되고 환율 급등에 따른 인상 요인이 휘발유 등 수입 원자재를 비롯한 각종 공산품의 가격 인상에 반영되고 있다. 1998년 비록 물가지수 상으로 5%를 유지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은 그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또한 외환 위기와 환율 급등이 재연될 경우 7%대 이상의 물가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 정책을 긴축 기조로 유지한다는 데 합의함에 따라

1998년 총 유동성 증가율(M3)은 13%대를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통화 긴축에 따른 일시적인 금리 상승을 용인하기로 한만큼 차입 의존도가 심한 기업들의 재무구조 악화가 우려되고 주식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재정 정책은 통화 정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금융 부문의 구조 조정에 따른 비용을 공급하기 위해 긴축적으로 유지하기로 합의되었다. 정부는 1998년도 통합재정수지를 GDP 대비 0.2%(1조 1,000억 원) 수준의 흑자로 이미 편성한 상태이나, 1998년도 성장률의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와 금융 기관 구조 조정에 따른 재정 지원 등에 따라 약 7조 원 정도 적자 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통세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인상과 함께 정부 투자의 축소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새정부 출범의 의미와 과제

이와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출범하는 새정부는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다. 우선 당면한 달러화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대외

신인도를 회복해야 할 뿐 아니라, 마비된 금융시스템을 정상화시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경제 난국과 IMF관리체제를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극복해야 한다. 아울러 21세기에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남북한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막중한 부담과 과제에도 불구하고 새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정책 환경은 매우 제한적이다. IMF는 정부 개입이나 규제를 최소화하고 민간에 의해 자율적으로 규율되는 경제운영체제로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정부 개입이나 통제에 의해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무엇보다 새정부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경제 위기는 구조 전환기에 나타나는 각종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것이다. 대내적으로 과거 30년간의 압축 성장 과정의 부작용으로 경제 전반에 표출되고 있는 경제의 조로화 현상, 양적 성장의 한계 봉착 등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외적으로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는 자율화·개방화·통합화라는 세계 경

제의 흐름에 제대로 순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구조적인 부실화 현상에 경기 순환적 요인과 세계 경제의 동조화 현상까지 겹친 데다, 이해 당사자간의 조정 메커니즘 부재, 정책의 일관성 및 적기성 부족 등 정부 정책 투입의 미흡함으로 인해 우리 경제는 총체적인 위기 국면에 직면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사안 하나하나에 얽매어서는 끝이 없다. 장기적인 경제 발전 전략을 먼저 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안을 풀어나가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 경제 체질의 강화를 위한 경제 기반 조성에 주력하여야 한다. 그동안 시장 원리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하는 각 부문의 규제 혁파,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 원리에 의한 자원 배분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 기반 확보를 위해 과학 기술 진흥, 산업 기술 개발, 효율적인 인력 개발, 사회 간접자본 확충 등에 주력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경제시스템 하에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에 걸맞게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

## 새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방향

첫째, IMF와의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대외 신인도의 제고 및 금융 시장의 안정을 조기에 달성해야 한다. 현재 우리 경제는 IMF 및 주요 선진국의 자금 조기 지원으로 외환 위기는 일단 최악의 고비를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998년 초에도 대규모의 단기 외채 상환이 대기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자금 지원과 더불어 그동안 빠져나간 외국인 민간 투자 자금의 유입을 촉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새정부는 금융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통해 부실 금융 기관을 조속히 정리하는 한편,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시장 개입 억제와 각종 규제 철폐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자유도를 최대한 제고시켜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 원리에 의해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 아울러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국제 금융 기관과 경제·통상 외교 활동을 활발히 진행시켜 신뢰 회복을 앞당겨야 한

다.

둘째, 크게 경색되어 있는 국내 금융시스템을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 11월 말 9개 종금사에 대한 영업 정지 조치로부터 촉발된 종금사에 대한 은행권의 불신은 증권사·투신사로 이어지면서 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면서 금융시장의 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크게 왜곡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로 인해 콜 거래나 CP 거래가 거의 중단되는 한편, 자금난에 허덕이는 금융기관들의 무차별적인 대출회수로 기업들의 부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시스템의 마비 현상을 조속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이는 또 다시 외환위기 재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거듭할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를 통해 금융권간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기업의 무리한 차입관행을 개선하고 금융기관의 취약한 대출심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 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유동성 위축이 연쇄 부도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채권 시장의 활성화 등 장기 자금 조달 수단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채권 시장이 부진했던 이유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선 국채 시장을 활성화하여 무위험 수익률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장기 채권 시장의 육성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채권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신용평가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위협에 따라 수익률이 차별화되는 시장 원리가 작동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지속적인 구조 조정을 통한 수출품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무역외수지 적자 축소 노력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상수지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율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동안 통화량이나 금리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던 통화정책의 운용 방식을 환율을 중심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차제에 자본 시장의 대폭 개방에 따른 핫머니의 빈번한 유출입을 억제하고 장기 자금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한편, IMF관리체제 하에서는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나 신규 투자 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적인 경쟁력 개선을 통해 생산 요소의 고비용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또한 IMF체제 하에서는 고유 브랜드 개발, 항만 시설 확충, 관광 산업 육성 등이 용이하지 않고 외채 이자 상환 등 새로운 적자 요인도 추가되므로, 여행 부문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무역외수지 적자를 축소해나가야 한다.

넷째, IMF관리체제를 조기에 극복함과 동시에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경제의 상황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리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과 향후 우리 경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적 단결을 호소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불요불급한 경상 지출과 자본 지출을 최대한 절감하고, 정부 조직의 간소화와 예산회계제도의 개선을 통해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고통 분담을 술선 수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 부문의 효율화를 통해 공공 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아울러 원자재·중간재 수급의 균형 유지, 환율과 금리의 안정 유도, 재정 지출 및 통화 공급의 적절한 조정 등을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시켜나가는 한편, 유통 구조 개선 등 유통 부문의 합리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실업 증대에 따른 고용 보험 확충과 재취업 알선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고용 보험 적용 대상 확대, 재취업 알선 기능 강화 등 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첨단·정보·벤처 산업에 대한 육성 등 장기적인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 한편, 기업도 생산성 제고, 경비 절감 등을 통해 고용 안정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한계 사업 부문을 과감히 정리하고 경쟁력있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기업 구조 조정도 적극적으로 추진시켜야 한다. 